

공공기관 발주사업 3조4천억원 오늘 원주서 계획 설명회 개최

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25일 오후 2시 원주시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2016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도·시·군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발주물량은 총 3,637개 사업에 3조4,14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위윤기자

철원 여성경영인 '찾아가는 자원봉사' 동참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군자원봉사센터와 협약

【철원】철원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안창도)와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철원지회(회장:송문숙)는 24일 철원한타리버스파호텔에서 참여와 나눔의 봉사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려하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철원



◇철원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안창도)와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철원지회(회장:송문숙)는 24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지회는 여성경영자들의 경제단체로서 회원들과 함께 정기적으

로 철원 관내 봉사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소외된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나눔으로 행복한 철원 만들기에 동참할 예정

이다. 이정국기자 jk2755@kwnews.co.kr

춘천시 올 상반기 3,163억원 예산 조기 집행

【춘천】춘천시는 올해 상반기 총 3,163억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집행 대상 5,752억원의 55%에 해당한다.

일반·기타·특별기금 2,606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577억원을 오는 6월30일 이전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다. 또 최대 40일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는 긴급입찰제도를 5일 이내로 줄이고 수의계약을 위한 공고 기간(최대 5일)도 3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조기 집행 정책기조에 맞춰 총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무현기자

올 도내 공사 발주 총 3조4143억 규모

올해 강원도에 총 3조4143억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된다.

24일 도와 도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 60개 기관에서 발주할 사업은 3637개 사업에 3조41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조3000억원 보다 소폭 상승한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건설공사가 2872건에 3조2832억원이며 설계용역이 765건에 1311억원으로 건설공사 비중이 96.1%다.

기관별로는 강원도와 시군이 51.5%인 2490건에 1조7599억원으로 발주액이 가장 많다. 또 원주국도관리청이 296건에 5193억원, LH공사 강원본부가 15건 1735억원, 도교육청 394건 1733억원,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192건에 1581억원 등이다.

도는 올 6월까지 연내 발주계획의 79.6%인 3434건 2조7198억원을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도 건설협회는 25일 원주 아모르컨벤션 웨딩홀에서 '2016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열고 올해 발주 계획을 설명한다. 안은복

영동지역 국도관리 262억 조기 집행

터널 보수 등 추진

올해 영동지역 국도 관리를 위해 예년 433억원이 투입된다.

강릉국도관리사무소는 이 가운데 60.5%인 262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건설경기 부양 등 내수시장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분야별 예산은 보도 설치와 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시설 및 도로안 내표지 정비, 경관도로 조성 등 9개소의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58억원을 투입하고 낙석·산사태 예방 및 노후교량 개축, 교량·터널 보수 등에 253억원이 사용된다. 또 교차로 개선과 자

전거도로 구축,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에 48억원, 도로선형개선 등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68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강릉/최동열

1999 CHORUS

법무법인 코러스

변호사 박형연, 유원석, 임채권
류재울, 김승휘, 정미영

(주) 서울시 중로구 중로 199 (중로4가 한일빌딩 9,10층)
상청사무소
삼척시 중앙로 181, 2층 (터미널 사거리)

전화 033-576-0416 0417
팩스 033-576-0418

태백 향연시립도서관 신축 내달 착수

25억 투입 연말 개관

설계 단계 조정 등의 문제로 착공이 4개월 넘게 지연된 태백 향연시립도서관 신축사업이 내달 본격화된다.

태백시는 향연시립도서관의 지난해 설계단계(에너지분야)를 올해 기준으로 다시 조정해 현재 강원도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연시립도서관의 설계반영이 완료되면 입찰 공고를 거쳐 오는 3월 본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연시립도서관은 연말 개관을 목표로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황지동 274-605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00㎡ 규모로 신축된다.

주요 시설은 2만4000권의 장서와 함께 종합자료실, 열람실, 북카페, 학습실, 문화강좌실 등이 들어선다. 또 자가도서대출 반납 시스템 등 최첨단 정보화 시스템도 구축된다.

도서관이 개관되면 황지·황연·삼수동 등 북부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북부권 도시 활성화와 평생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학교와 아파트, 상가 등 인구밀집지역인 북부

권에 도서관이 없어 그동안 주민들의 건립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는 한편 도서관 확충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백/김우열 woo96@kado.net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25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컨벤션 웨딩홀에서 '2016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주관한다.

LH, 중시제 세부심사기준 확정... 다음달부터 적용

입찰금액 심사 산식 등 변경... 적정낙찰률 확보 장치 마련

한국도지주공사(LH)가 공기업 중 최초로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 적용할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중시제)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입찰금액 심사 산식과 단가심사 비율을 바꿔 적정 낙찰률을 확보하고, 시공인력과 매출액 비중, 배치기술자 등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을 완화해 문호를 넓혔다.

한국도지주공사(LH)는 '중시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낙찰률 확보와 입찰 참여 기회 확대, 상생협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낙찰률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입찰금액 심사 산식과 표준시장단가 등 고정비율이 높은 공사의 단가심사 비율과 동종차 차기기준을 변경해 적정 낙찰률이 결정되도록 했다.

특히 입찰금액이 균형가격 미만보다 초

공사수행능력 평가 등 완화 지역·중소사 입찰기회 확대

고정비용 비중에 따른 단가심사 비율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
20% 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9%
25% 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30% 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1%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2%

과인 경우 점수 감점 폭이 상대적으로 크도록 입찰금액 심사 기준을 변경했다.

또 표준시장단가 등 고정비율이 높은 토목공사의 단가 심사 감점 비율을 고정비율에 따라 19~22%로 심사하도록 변경했다.

〈표 참조〉 아울러 시공인력, 매출액 비중, 배치기술자, 시공평가 점수 등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와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배점을 상향해 중

와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 중 시공인력 심사 시 시공실적 심사 배점(10점)의 80%만 인정하던 것을 100% 인정기로 했다.

또 매출액 비중 심사의 만점 기준을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건축공사는 80%에서 65%, 토목공사는 80%에서 50%로 각각 낮추고, 1000억원 이상 건축공사도 기존 60%에서 50%, 토목공사는 60%에서 40%로 각각 완화했다.

배치기술자 심사 시 만점 기준도 현장대리인은 7년에서 6년으로 낮추고, 기타 직위 참여 경력도 배점으로 인정해 현장대리인 경력이 부족해도 보완이 가능토록 했다.

다불어 분야별 책임자의 만점 기준을 시공책임자는 10년에서 6년, 안전 및 품질책임자는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시공평가 점수 심사는 연례별 시공평가 점수에 따라 7단계로 13.8~15점에 서 14.1~15점으로 단계별 점수 편차를 줄이고 상향기로 했다.

이 밖에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는 추

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했으나 500억원 미만 공사도 심사하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심사하는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0.2점에서 0.3점으로 늘렸다.

LH 송준경 계약단장은 "이번 LH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한 입찰금액 심사 점수 산정 변경 등으로 과도한 고가 낙찰과 저가

낙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해소해 적정낙찰률이 결정될 것"이라며 "공사수행능력 심사 기준 완화 등으로 입찰 참여 업체 증가와 중소 및 지역업체와 상생 협력이 기대되는 등 종합심사 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지난 2년간 시범사업... 주요 심사기준 완화됐지만

배치기술자 심사 항목 등 타 발주처보다 만점기준 높아

한국도지주공사(LH)의 중시제 세부심사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토대로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앞서 특례운용기준에 비해 주요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일반공사와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은 앞서 특례운용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사회적 책임 가점 문항에서 건설인력 고용은 기존 0.3점에서 0.2점으로 낮춘 반면 지역경제 기여도는 종전 0.2점에서 0.3점으로 올렸다.

하지만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을 초과할 때 감점 폭이 미만보다 2배가량 크도록 입찰금액 산식을 설계해 저가 투찰을 유도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배치기술자 심사기준도 기존에 비해 완화했지만, 조달청 등 다른 발주처에 비해 만점기준이 높고, 특히 분야별 책임자의 품질(안전)책임자는 동일업종 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관련 참여경력으로 제한한다.

이로 인해 만점기준인 5년 이상 품질(안

전)책임자를 구비하지 못한 건설업체는 입찰 참가에 비상이 켜졌다.

또 계약예규 따라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의 경우 시공 책임자 심사대상 인원을 3명으로 설정한 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인력 심사대상 인원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한 것도 만점기준을 충족하려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개 이상 공사에 같은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해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 예정인 경우 배치기술자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계약예규에 따른 것이나 LH의 경우 특히 연말에 여러 건을 동시에 발주하는 경향이 있어 별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시공계획 심사의 공사에 낙찰 노임 체불 등 중대민원권 경고장, 미준공(지연), 안전사고(사망사고), 발점 등으로 감점을 받는 점도 부담이다.

채희찬기자

정부, 재정 조기집행 '총력전'

기획재정부, 소관부처, 공공기관, 지방재정을 축으로 하는 재정 조기집행 체제가 본격 기능에 들어갔다.

긴급입찰제도, 설계·시공 동시 추진, 선급금 지급, 용자비 투입 등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이 총동원된다.

기재부는 24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집행체제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기재부는 경기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머니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당초 8조원에서 6조원 늘린 1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각각 2조원 늘려 6조원씩 집행하고 지방교육재정을 2조원 추가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총력 집행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소관부처, 공공기관, 지방재정이 현장 일선에서 실질적인 재정집행을 맡는 방식이다.

우선 기재부는 그간 재정관리실무점검회의, 부처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재정집행 애로사항 등을 체크하고 국도건설사업, 국가하천정비사업, 연안정비사업 등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사업비에 대

기재부, 컨트롤타워 역할 소관부처·공공기관·지방 현장서 실제 집행 맡기로

긴급입찰 제도 활용 설계·시공 동시 추진 선급금도 최대한 지급

한 집행을 독려했다.

또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한시적으로 10일 내에 조기 지급하고 선급금 지급기한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했다. 기재부는 재정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해 부진요인을 끝까지 추적 해소할 계획이다.

소관부처는 세부사업에 대한 재정집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사업별 집행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선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집행장애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처 예산집행심의회를 열고 기재부와 공동으로 애로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한국도지주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주

요 SOC(사회기반시설) 분야 공공기관의 경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1분기 집행률을 극대화한다.

이들 공공기관은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 추진하면서 집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법정한도 내에서 선급금을 최대한 지급하고 민원에 발목이 잡혀 있는 용지비의 집행도 확대한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모든 조기집행사업을 긴급입찰로 발주하고 일시차입 지원, 당일 대가 지급 등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재정을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올 1월 중 재정집행 실적은 당초 계획(20조6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초과한 2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노 재정관리관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이 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모두 1분기 총력 집행에 나서 달라"며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현장 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애로요인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오늘 2016년 발주계획 설명회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25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2016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

한다. 설명회에는 강원도를 비롯한 각 시·군, 건설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설명회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계약실적' 파악 과도한 업무 건설사 전가... 제재 남발

지난 23일 대한건설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장경래 광명종합건설 대표가 발언권을 얻어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에 물어보니 분기마다 계약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라는데 여기에 과태료와 같은 제재를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기 있는 대의원들 가운데 안 겪어본 분이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동안 폐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모두가 나서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건의를 채택하자"고 말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건설사라면 이 제도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여서 발언에 대한 공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과도한 업무 반복** 건설사들이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제때 못 해 무더기 제재를 받는 이유는 입력하는 데 필요한 업무량이 과도한 데다 수시로 반복되면서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KISCON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원도급 계약 시 공사개요(공사명, 공사지역 및 현장소재지, △공종, △산재보험 △근로자퇴직공제 △계약내용)와 수급업체(대표 △구성사 여부 △업종 △도급금액), 보증

하도급 업체마다... 계약변경 때마다... 정보입력 수십번 반복 건설현장 운영 차질
처분 내리는 지자체 인력부족 호소에도 국토부 제도개선 뒷짐
계약정보입력 전담주체 발주자로 전환해야

금이 아니다. 공사 중 계약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작업을 또 해야 한다. 현장 기술자 변경이나 공사대금 수령과 관련한 내용도 입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입력할 내용이 한둘이 아니어서 전담 인력을 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반복되는 업무 가운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한 대형건설현장 관계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계약을 하고 틈을 꾸리는 기간에 건설현장에서 는 업무가 폭증한다"며 "현장 인력 구성이 늦어질 수도 있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현장과 같이 하도급사가 많은 곳은 업무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변경계약이 이뤄지면 하도급 관련 신고도 모두 다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명단이 오면 업계 청문을 거쳐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해당 업체와 부딪치는 일도 많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 국토 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역시 이 제도에 대한 개선이 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해왔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건설은 발주자가 계약관련 유사내용을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데 건설사가 다시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발주자가 보유한 계약정보를 활용하면 되는데 재수단을 동원해 쉽게 정보를 축적하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건설은 또 이 업무로 건설업체가 투입하는 규제비용은 1100억~1500억원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금 납부내역, 현장기술인(△인적사항 △배치기간 △자격현황), 직접시공 계획서 등이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과 분량을 다시 입력해야 한다. 특히 하도급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각 하도급사와 계약할 때마다 입력하려면 많은 번거로움이 따른다. 하도급 이외에 건설기계 대여와 부품 제작납품 계약 때도 같은 업무를 반복해야 한다. 이 과정을 완벽하게 처리했어도 끝난

특히 건축현장과 같이 하도급사가 많은 곳은 업무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변경계약이 이뤄지면 하도급 관련 신고도 모두 다시 해야 한다고 전했다. **불필요한 부담주는 규제** 통보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건설사가 폭증하면서 제재를 직접 내리는 지자체의 업무부하도 상당하다. 일례로 서울시는 행정처분 업무를 6명의 직원이 지치구별로 나눠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인력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벅차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건설은 발주자가 계약관련 정보입력을 발주자로 전환해 중복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공사대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작성해 건설현장이나 영업소에 비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독자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①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의로써 개별 조합원이 조합채무자에게 자신의 지분별로 채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별 구성원이 자기 지분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계약담당 공무원은 선급,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급은 주계약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용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에서는 각 구성원별로 공사대금을 수령할 은행계좌를 구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은행계좌를 통해 각기 수령한다. 즉 현재의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는 공사대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도 공사대금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별로 각자 지급받는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관공사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지분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다. 이는 일견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 공동수급체의 재산은 구성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고, 각자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론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